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목 차>

1. 과징금 부과기준 (부과기준을 설정 관련)
2. 과태료 부과기준 (예정금액 산출 관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이영평
	담당부서 (과)	금융제도팀		직급	5급
	국장	유재수		연락처	02-2100-2842
	과장	홍성기		이 메 일	ypyunglee@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유 재 수 (서 명)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과징금 부과기준 (부과기준율 설정 관련)																		
	2.규제조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3.위임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제6항 등																		
	4.유형	강화	5.규정변경예고	2017.8.3. ~ 8.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 부과한도액 구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체감 증가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하여 과징금 효과 제고 <input type="checkbox"/>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그 부과방식 등을 민간 자율에 맡기기 어려움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체감구조로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폐지 하고,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 내용</th></tr><tr><td>피규제자</td><td>금융회사, 금융회사 임직원 등</td><td>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td><td>규정변경예고</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금융감독원</td><td>-</td><td>TF 운영, 규정변경예고 등</td><td>-</td></tr></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자	금융회사, 금융회사 임직원 등	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	규정변경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	TF 운영, 규정변경예고 등	-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자	금융회사, 금융회사 임직원 등	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	규정변경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	TF 운영, 규정변경예고 등	-																
9.기대효과	과징금 부과 합리성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행정제재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생략																		
기타	12.일몰설 정 여부	해당 없음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p> <p>4. 기본과징금의 산정</p> <p>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에 한한다), 보험회사(특별이익제공관련 위반행위 제외),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p> <table><tr><th>법정부과한도액</th><th>기본부과율</th></tr><tr><td>2억원이하 (1단계)</td><td>× 7/10</td></tr><tr><td>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td><td>× 7/20</td></tr><tr><td>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td><td>× 7/40</td></tr><tr><td>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td><td>× 7/80</td></tr><tr><td>2천억원 초과 (5단계)</td><td>× 7/160</td></tr></table> <p>&lt;산정례&gt;</p> <table><tr><th>법정부과한도액</th><th>기본과징금</th></tr><tr><td>2억원 이하</td><td>법정부과한도액 × 7/10</td></tr><tr><td>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td><td>2억원 × 7/10 + (법정부과한도액 - 2억원) × 7/20</td></tr><tr><td>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2억원 × 7/10 + 18억원 × 7/20 + (법정부과한도액 - 20억원)</td></tr></table>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 × 7/10 + (법정부과한도액 - 2억원)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법정부과한도액 - 20억원)	<p>[별표 2] -----</p> <p>4. -----</p> <p>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에 한한다),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p> <p>&lt; 부과기준율표 &gt;</p> <table><tr><th>중대성의 정도</th><th>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h><th>부과기준율</th></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3이상</td><td>100%</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6이상 2.3미만</td><td>75%</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6미만</td><td>50%</td></tr></table> <p>※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p>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 × 7/10 + (법정부과한도액 - 2억원)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법정부과한도액 - 20억원)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times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text{억원} \times 7/10 + 18\text{억원} \times 7/20 + 180\text{억원} \times 7/40 + (\text{법정부과한도액} - 200\text{억원}) \times 7/80$
2천억원 초과	$2\text{억원} \times 7/10 + 18\text{억원} \times 7/20 + 180\text{억원} \times 7/40 + 1,800\text{억원} \times 7/80 + (\text{법정부과한도액} - 2,000\text{억원}) \times 7/160$

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큰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 중(2점)
-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유사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유사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중(2점)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현행 과징금은 검사·제재규정 등\*에 따라 법정 부과한도액 (통상 위반금액 × 법률상 부과비율)\*\*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기본과징금에 가중·감경 및 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

\* 금융지주·여전·신정법은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예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위반 : 초과한 신용공여액 × 10%

\*\*\* (2억이하) 7/10 → (2~20억) 7/20 → (20~200억) 7/40 → (200~2,000억) 7/80 → (2,000억 초과) 7/160

법정 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	---------	-------	-----------------	--------------

- **(추진배경)**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본부과율에 따른 기계적인 기본과징금을 산출로 인해 개별 사안별로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고,

- 법정 부과한도액 구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체감 증가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하여 위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 징벌·제재 효과 부족

- 공정위·방통위 등 타부처에 비해 적은 금액이 산정되는 구조

- 최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17.8.16 공포, 10.19일 시행)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새로 신설하여(별표 7의2)

-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는 "부과기준율"을 도입\*

\*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

※ 과징금의 법적 근거를 둔 타 금융법 시행령도 '부과기준율' 도입을 근거로 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17.10.19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

- **(정부개입 필요성)** 과징금은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 환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제재로서, 그 부과한도 등을 민간 자율에 맡기기 어려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체감구조로 적용되는 ‘기본 부과율’을 폐지하고,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새로 도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7의2)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별로 부과기준율을 부여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 위반행위 내용 : 위반행위 동기 / 방법 별로 각각 0.2 / 0.2 가중치 부여  
 위반행위 정도 : 부당이득규모 / 피해규모 / 시장영향별로 각각 0.2 / 0.2 / 0.1 가중치 부여  
 위반기간·횟수 : 0.1 가중치 부여

- 세부평가 결과 산정점수\*에 따라 3단계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해당 비율에 10%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조치안에 사유 명시)

\* 1구간:  $1 + \{(3-1)/3\} = 1.6$  / 2구간:  $1.6 + \{(3-1)/3\} = 2.3$  / 3구간:  $2.3 + \{(3-1)/3\} = 3$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0%, 중대한 위반행위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

$$\boxed{\begin{array}{c} \text{법정부과한도액} \\ (\text{위반금액} \times \text{부과비율}) \end{array}} \times \text{부과기준율} \times \boxed{\begin{array}{c} \text{기본과징금} \end{array}} \pm \begin{array}{c} \text{가중·감경} \\ \text{및 조정} \end{array} = \boxed{\begin{array}{c} \text{과징금} \\ \text{부과액} \end{array}}$$

※ 공정위도 당초 관련 매출액이 커질수록 부과기준율이 체감하는 방식이었으나, '04.4월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정하도록 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고시)]

- **(선택 근거)** 부과기준을 도입 등 금전제재 합리화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재개혁」(‘15.9월)의 일환
-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을 도입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이 인상될 여지가 있으나,
    - 법령위반의 내용·효과 등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로 과징금 제도의 합리성으로 제고하고
    - 업권 규모 및 타 기관 사례에 비해 경미했던 금전제재를 현실화하는 수준으로 인상 수준도 타 법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방통위·공정위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유사하여 법률 간 과징금 부과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 미국 등 선진국도 과징금 산정 시 고의성 정도 등 위반의 중대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는 측면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특이사항 없음
금융회사 등	규정변경예고로 의견 수렴	특이사항 없음



### 3. 기대 효과

□ 과징금의 기계적 산정으로 사안별로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거나 대형 금융사고·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숨방망이 제재”라는 비난이 많았음

○ 위반행위·효과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부과대상자의 수용도를 제고하고

○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현저히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대\*

\*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을 도입으로 인한 과징금은 약 2.4배 인상 기대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목적)** 금융회사 및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합리화 및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를 억제하여, 금융회사의 신뢰성,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편익을 제공

□ **(규제수단)** 과징금 부과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등 타법권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 금전제재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관련 >

- ① **(미 국)** FDIC가 채택한 민사제재금(Civil Money Penalty) 산정 가이드라인은 과징금 부과에 있어 14가지 요소\*를 점수화하여 8단계별 조치 부과

\* 고의성, 금전이익 취득, 과거 제재, 과거 동일위반, 손실 정도, 미해결 상태 위반건수, 통지전 위반의 지속정도, 통지후 위반의 지속정도, 은폐, 기타 약영향, 주주 및 소비자 손실, 상환 정도, 선의, 협조

구 분	0	1	2	3	4	가중치
고의성 여부	없 음		미필적 고의		명백한 고의	5
금전이익 취득여부	없 음			간접적 금전이득	직접적 금전이득	4
과거 제재	없 음	유사한 위반으로 주의	주의 및 지적사항	양해각서, 감독서한	중지명령, 협정, 과징금	3
:	:	:	:	:	:	:

점수별 고려 가능한 해당 조치 및 과징금 부과액	
점 수	고려 가능한 조치
0 - 30	보고 생략 가능
31 - 40	감독서한(supervisory letter) 발송
41 - 50	1,000달러 초과 5,000달러 이하 과징금 부과
:	:
120 -	125,000달러 이하 과징금 부과

- ② **(영 국)** FCA는 5단계\* 제재금(Financial Penalty) 결정과정을 거치며 2단계에서 중대성을 평가

\* 1단계: 부당이익 환수, 2단계: 위반의 중대성을 반영한 금액 결정, 3단계: 2단계 금액의 가중·감경, 4단계: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상향조정, 5단계: 제재금 감액 협의(30% 이하)

- 위반행위의 영향, 본질, 고의성·과실 등 요소별 검토를 통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

-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전체 수익의 0%(Lv.1), 5%(Lv.2), 10%(Lv.3), 15%(Lv.4) 20%(Lv.5) 중 “관련성 있는 수익” 결정

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
위반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의 위험이 발생</li> <li>- 금융기관 내부통제절차 또는 경영시스템 등에 심각한 위험을 노출시킨 경우</li> <li>- 금융범죄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li> <li>- 해당 금융기관의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경우</li> <li>-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하게 발생한 경우</li> </ul>
위반의 중대성이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위반행위로 이득 또는 손실회피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li> <li>-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대한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 위험을 발생시킨 정도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li> <li>- 시장의 신뢰와 질서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li> <li>-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또는 취약성과 관련된 증거가 없는 경우</li> <li>- 위반행위가 부주의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li> </ul>

### < 금전제재 부과사유 · 부과금액 및 사례 >

- 주요국의 금전제재는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금액을 부과

- **(영국 · 미국)** 영국은 Financial Penalty, 미국은 Civil Money 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 ·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제재를 부과

- 우리나라는 과태료 · 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 · 부과요건 · 부과금액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
- 영국과 미국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 가능

- 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으로 규정

- 미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

\* 위반행위 1일당 (1단계) \$7,500 / (2단계) \$37,500 / (3단계) \$1,425,000

- 미국이나 영국은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과징금 등 금전제재를 부과해 옴

- '16년 세계 최대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해 고객명의 무단도용 등 사유로 CFPB(미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가 \$1억(1천억원), OCC가 \$3.5천만(3.5백억원), LA City가 \$5천만(5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13년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에 대해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2억(2천억원), FRB가 \$2억(2천억원), OCC가 \$3억(3천억원)의 민사제재금을, 영국 금융당국은 £1.4억(2천억원) 등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11년 SEC는 내부자 거래 관련 캘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에 대해 부당이득인 \$5천만(5백억원)의 약 2배에 가까운 \$9천만(9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 (독일 · 일본)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독일은 과태료 · 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 Bußgeld라는 단일 금전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최대 100만유로)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태료 · 과징금\*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최대 30억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국은 금융법 위반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은 물론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 금전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빈번히 제기됨

## ○ 타법사례

### □ 금융법 외 타 법(공정거래법·정보통신망법) 사례 분석

#### ○ 공정거래법·정보통신망법

①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부과기준율(3%)로 기본과징금 산정

② 가중·감경·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액 결정

⇒ 위반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

### □ 금융법 사례 분석

○ 금융법 상 과징금 부과한도는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 부족

⇒ 최근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등 개정('17.4.18, '17.10.19 시행)을 통해 과징금에 대해 「법정부과한도액」을 약 3배 인상\*

\* 예: 2%→5%, 10%→30%

※ '14.1월~'16.10월, 지주, 보험, 자본시장, 저축은행, 여전 등 총 5개 법률 위반 과징금 215건 분석 결과, 개인에 대해서는 16건, 건당 1,713만원을, 법인(금융회사, 기업)에 대해서는 199건, 건당 15,104만원을 부과하여 부담능력 수준 고려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재개혁」(15.9월)의 일환

- 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할 과징금 금액도 타기관, 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 규제 차등화 방안

□ 과징금은 동일 권역의 기관 등이 행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

####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번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함

- 또한, 기존의 과징금 산정체계 하에서 기본부과율 대신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의 과징금 산정체계 하에서 기본부과율 대신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과징금 부과 기준 합리화 및 부과금액 인상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 개혁 추진방안」(‘15.9월)의 후속조치임
- 방안 발표 후에도 피규제대상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2차례(‘15.12월, ‘16.10월)에 걸친 제재개혁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심층인터뷰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하였음

###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 금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제재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기준 (예정금액 산출 관련)																		
	2.규제조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3.위임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8 등																		
	4.유형	강화	5.규정변경예고	2017.8.3. ~ 8.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예정비율 산정시 위반동기 및 결과에 대한 구분이 불완전하여 개별 사안에 적용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산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 <input type="checkbox"/>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그 부과방식 등을 민간 자율에 맡기기 어려움																		
	7.규제내용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세분화·구체화하는 한편, 예정비율을 조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 내용</th></tr><tr><td>피규제자</td><td>금융회사, 금융회사 임직원 등</td><td>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td><td>규정변경예고</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금융감독원</td><td>-</td><td>TF 운영, 규정변경예고 등</td><td>-</td></tr></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자	금융회사, 금융회사 임직원 등	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	규정변경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	TF 운영, 규정변경예고 등	-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자	금융회사, 금융회사 임직원 등	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	규정변경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	TF 운영, 규정변경예고 등	-																
9.기대효과	과태료 부과 합리성 및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행정제재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생략																		
기타	12. 일 물 설 정 여부	해당 없음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p> <p><u>3. 예정금액의 산정</u></p> <p><u>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u></p>	<p>[별표 3] -----</p> <p><u>3. 예정금액의 산정</u></p> <p><u>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u></p>																												
<table><tr><th>동기 위반결과</th><th>고의</th><th>과실</th></tr><tr><td>중대</td><td>법정최고금액의 100%</td><td>법정최고금액의 75%</td></tr><tr><td>보통</td><td>법정최고금액의 75%</td><td>법정최고금액의 50%</td></tr><tr><td>경미</td><td>법정최고금액의 50%</td><td>법정최고금액의 25%</td></tr></table>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table><tr><th>동기 위반결과</th><th>상</th><th>중</th><th>하</th></tr><tr><td>중대</td><td>법정최고금액의 100%</td><td>법정최고금액의 80%</td><td>법정최고금액의 60%</td></tr><tr><td>보통</td><td>법정최고금액의 80%</td><td>법정최고금액의 60%</td><td>법정최고금액의 40%</td></tr><tr><td>경미</td><td>법정최고금액의 60%</td><td>법정최고금액의 40%</td><td>법정최고금액의 20%</td></tr></table>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p>※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1) <u>중대</u>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p> <p>(2) <u>보통</u>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p> <p>(3) <u>경미</u>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p>	<p>※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1) <u>중대</u> : 당해 또는 유사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p> <p>(2) <u>보통</u>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p> <p>(3) <u>경미</u> : 당해 또는 유사 위반행</p>																												

<신 설>

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  
(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  
다.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 황)** 금융법상 과태료는 **법정최고금액\***에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에 따른 비율(예정비율)을 곱해 산정한 예정금액에 가중·감경 및 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

\* 금융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별 기준금액을 의미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경우(저축은행·전금·신협법) 법률상 부과한도액

$$\boxed{\text{법정최고금액}} \times \text{예정비율} \times \boxed{\text{예정금액}} \pm \text{가중·감경 및 조정} = \boxed{\text{과태료 부과액}}$$

- 예정비율은 위반결과(중대·보통·경미)와 위반동기(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
- **(추진배경)**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상 위반동기(‘고의’, ‘과실’)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위반결과에 대한 구분도 불완전하여 개별 사안에 적용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산정표에 의해 예정비율이 기계적으로 산정됨에 따라 금융당국 재량의 여지가 없는 구조이므로 보완할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 금융수요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위법·부당성 정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세분화\*하고, 동기 및 위반결과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예정비율을 조정

\* 위반동기를 상·중·하로 구분 후 고의·과실 여부 뿐 아니라 목적·동기·경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평가

- 또한,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 예정 비율에 10%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안에 사유 명시)

- 감독당국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보아 과태료를 중하게 부과하도록 함

#### <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 개선안 >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유사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유사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 **(선택 근거)** 과태료 예정비율 산정 시 과태료 부과금액이 인상될 여지\*가 있으나,

\* 위반동기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 고의가 아닌 위반행위("과실")에 대해 개정 후 중과실로 판단하여 "중"으로 산정되는 경우 등

○ 법령위반의 목적, 위반 경위 등에 따른 예정비율 산정으로 과태료 부과가 개별 사안에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 업권 규모 등에 비해 경미했던 금전제재를 현실화 하는 수준  
이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 미국 등 선진국도 금전제재 금액 산정시 위반 목적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

○ 아울러 금융당국의 재량권 확보 및 원활한 검사 이행이 담보  
되는 등 감독업무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필요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특이사항 없음
금융회사 등	규정변경예고로 의견 수렴	특이사항 없음

## 3. 기대 효과

□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상 '위반동기'의 구체화·세분화를 통해  
개별 사안에 보다 합리적으로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 예정비율의 일정 범위(1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  
당국 재량의 여지가 없는 구조를 개선

- 아울러 검사 방해 등에 대해 “중대” 위반결과 산정으로 적법한 검사 절차 이행시 금융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음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금융회사 및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합리화 및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를 억제하여, 금융회사의 신뢰성,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편익을 제공
- ☐ **(규제수단)**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등 타법권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 금전제재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관련 >

- (미국)** FDIC가 채택한 민사제재금(Civil Money Penalty) 산정 가이드라인은 과징금 부과에 있어 14가지 요소를 점수화하여 8단계별 조치 부과

\* 고의성, 금전이익 취득, 과거 제재, 과거 동일위반, 손실 정도, 미해결 상태 위반건수, 통지전 위반의 지속정도, 통지후 위반의 지속정도, 은폐, 기타 악영향, 주주 및 소비자 손실, 상환 정도, 선의, 협조

구 분	0	1	2	3	4	가중치
고의성 여부	없 음		미필적 고의		명백한 고의	5
금전이익 취득여부	없 음			간접적 금전이득	직접적 금전이득	4
과거 제재	없 음	유사한 위반으로 주의	주의 및 지적사항	양해각서, 감독서한	중지명령, 협정, 과징금	3
:	:	:	:	:	:	:

점수별 고려 가능한 해당 조치 및 과징금 부과액	
점 수	고려 가능한 조치
0 - 30	보고 생략 가능
31 - 40	감독서한(supervisory letter) 발송
41 - 50	1,000달러 초과 5,000달러 이하 과징금 부과
:	:
120 -	125,000달러 이하 과징금 부과

② **(영 국)** FCA는 5단계\* 제재금(Financial Penalty) 결정과정을 거치며 2단계에서 중대성을 평가

\* 1단계: 부당이득 환수, 2단계: 위반의 중대성을 반영한 금액 결정, 3단계: 2단계 금액의 가중·감경, 4단계: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상향조정, 5단계: 제재금 감액 협의(30% 이하)

- 위반행위의 영향, 본질, 고의성·과실 등 요소별 검토를 통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
-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전체 수익의 0%(Lv.1), 5%(Lv.2), 10%(Lv.3), 15%(Lv.4), 20%(Lv.5) 중 “관련성 있는 수익” 결정

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
위반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의 위험이 발생</li> <li>- 금융기관 내부통제절차 또는 경영시스템 등에 심각한 위험을 노출시킨 경우</li> <li>- 금융범죄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li> <li>- 해당 금융기관의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경우</li> <li>-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하게 발생한 경우</li> </ul>
위반의 중대성이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위반행위로 이득 또는 손실회피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li> <li>-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대한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 위험을 발생시킨 정도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li> <li>- 시장의 신뢰와 질서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li> <li>-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또는 취약성과 관련된 증거가 없는 경우</li> <li>- 위반행위가 부주의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li> </ul>



## < 금전제재 부과사유 · 부과금액 및 사례 >

- 주요국의 금전제재는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금액을 부과
  - **(영국 · 미국)** 영국은 Financial Penalty, 미국은 Civil Money 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 ·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제재를 부과
    - 우리나라는 과태료 · 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 · 부과요건 · 부과금액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
    - 영국과 미국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 가능
    - 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
      -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으로 규정
    - 미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
      - \* 위반행위 1일당 (1단계) \$7,500 / (2단계) \$37,500 / (3단계) \$1,425,000
    - 미국이나 영국은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과징금 등 금전제재를 부과해 옴
    - '16년 세계 최대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해 고객명의 무단도용 등 사유로 CFPB(미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가 \$1억(1천억원), OCC가 \$3.5천만(3.5백억원), LA City가 \$5천만(5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13년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에 대해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2억(2천억원), FRB가 \$2억(2천억원), OCC가 \$3억(3천억원)의 민사제재금을, 영국 금융당국은 £1.4억(2천억원) 등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11년 SEC는 내부자 거래 관련 캘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에 대해 부당이득인 \$5천만(5백억원)의 약 2배에 가까운 \$9천만(9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독일 · 일본)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독일은 과태료 · 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 Bußgeld라는 단일 금전 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최대 100만유로)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태료 · 과징금\*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최대 30억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 또는 임직원의 검사 거부 · 방해 및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범죄 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 (미국) 검사방해는 범죄행위로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대상(18 USC 1517)
- (영국) 검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위조 · 은닉, 폐기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병과 가능)에 처할 수 있음
- (일본)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병과할 수 있음(금융상품거래법 제 198조의6)

## ○ 타법사례

□ 공정위, 방통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검사·제재 기준과 같은 구체적 부과기준은 별도 없으며

○ 법무부 예규인 상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은 위반행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가중 사유를 두고 있음

[상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 별표 2]

사 유	비 율
위반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20%
위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0%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혹은 5년 이내 2회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30%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혹은 5년 이내 3회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50%
위반행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부과금액을 산정하는데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0%

○ 공정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벌칙 부과 근거 법률\*이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6⑪11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재개혁」(15.9월)의 일환

- 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할 과태료 금액도 타기관, 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 규제 차등화 방안

- 과태료는 동일 권역의 기관 등이 행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번 개정안은 과태료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함

- 또한,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예정비율 산정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는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의 후속조치임

- 방안 발표 후에도 피규제대상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2차례 ('15.12월, '16.10월)에 걸친 제재개혁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심층인터뷰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하였음

##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 금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제재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